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공방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윤 전 대통령 측과 설전

“추정된 과업 아닌가” 묻자 “명시적 임무”라 반박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두고 법정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부의 지시가 아닌 현장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지 않았으나 증인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부처절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은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사령관이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대령에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시간을 12월 4일 오전 0시4분으로 특정했는데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나’ 질문했다. 조 대령은 “40~45분이라고 말했고 특정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끌어내기 지시에 ‘예하부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특전사와 소통해 보라’고 이 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송 변호사가 사령관 지시에 불가하다는 취지로 건의하는 게 가능한냐는 취지로 거듭 묻자, 조 대령은 “그게 (정치인 끌어내기)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되물기도 했다.

조 대령은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고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물었다.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대령은 “갑히 소령이 3성 장군(중장, 이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못 따른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왜 그랬을 지는 생각해 보시면 알 것”이라고 거듭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부가 시킨 것을 하급자가 이해해 판단한 ‘추정된 과업’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대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고 지시했다는 예하부대 윤모 소령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인 끌어내기’는 조 대령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조 대령은 “임무일 것이라고 추론

한 게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지 않나”라며 명시적 임무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령관이 지시를 철회했다고 묻자, 조 대령은 “철회한다고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다. 또 자신이 윤모 소령에게 말한 ‘의원’은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이번에는 조 대령의 진술이 때와 장소에 따라 자꾸 바뀐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번에 현재에서 서강대교를 돌았다고 했는데 어는 것이 사실일까”라며 “기억을 못하는 건가. 계산을 하지 말고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윤 변호사는 “검찰 진술과 현재 증언, 본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 다르다”고 했고, 조 대령은 “다 사실”이라고 했다. /뉴스

광주 찾은 양향자…“尹계엄은 내란, 탄핵 후보 사죄해야”

국민의힘 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한다”며 “탄핵 반대(탄반) 국민의원 후보들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계엄령이 갑자기 발동된 것은 대통령의 역량이 없었고 정치 훈련을 교육받지 않았고 야당에 대항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령에 찬성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으로政치를 시작해 2020년 광주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양 후보는 “민주당과 정체성이 충돌해 결별했다”며 “(국민의원 입당에 대한)호남의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새기면서 유능함으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수십년 간 민주당 지지해서 광주·전남이 잘 사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이종연합이 돼야 견제와 감시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자 영역에서 충실해야 한다. 새로운 뉴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국민의힘 입당 명분을 제시했다.

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은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중학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교부율을 조정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교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과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래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씩 분담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국고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부율 상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기별촬영. 위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등 진상규명 위원들과 기별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50% 돌파...김문수 12.2% 한동훈 8.5%

민주 후보 적합도...이재명 53.4% 김동연 17.3% 김경수 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4월 3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 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같은 기간 1.3%포인트 오른 12.2%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8.5%,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7.5%,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0%,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5%, 김동연 민주당 후보 2.0%, 김경수 민주당 후보 1.8% 순이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후

보 53.4%,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등의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보면 이재명 후보 82.9%, 김동연 후보 5.5%, 김경수 후보 3.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김문수 후보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등의 순이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보면 김문수 후보 27.8%,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안철수 후보 7.7%, 유정복 후보 1.7%, 이철우 후보 0.6%, 양향자 후보 0.5% 등의 순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3자 가상대결을 벌일 경우 각각 54.2%, 23.6%,

6.1%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11.7%, 잘 모름은 4.4%다.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준석 후보가 대선 3자 가상대결을 하면 각각 54.6%, 16.2%, 5.4%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준석 후보가 대선 3자 가상 대결을 벌이면 각각 54.6%, 20.5%,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284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6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국민의힘 1차 경선 돌입...오늘 4명 압축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22일 오후 7시 발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1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100%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총 5개 여론조사 기관이 21일부터 22일까지 총 4000명의 샘플(표본)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를 합산해 결과를 향후여선관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며 “합산에는 각 후보자들의 대리인이 참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 진출자 명단을 위원장이 22일 오후 7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다.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

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호 대변인은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공방이) 서로 탈당을 촉구하면서 비방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구두 경고나 조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정도의 수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선이 벌어지면서 비판이 있고 경쟁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선 토론에) MBTI 기반 자기소개 방식이나 밸런스 게임을 도입해 품격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엔 “앞으로 진행과정 중에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예산 전액 반영을”

광주상의, 기재부·국회에 건의문…“670억 중 25억만 추경”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광주 국가 A데이터센터의 정상적인 운영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운영예산 670억원 전액을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A데이터센터는 전국 900여 개 기업이 약 2000건의 AI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국가 단위의 공공 인프라다. 고성능 GPU 연산장비,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보안 인증 체계, AI 테스트베드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들 통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고비용인프라 없이도 AI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이번 추경안에는 총 670억원 규모의 운영예산 중 단 25억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이에 광주상의는 “국가적 활용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면서 “A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가 활용하는 전략적 기반시설임을 고려해 국가사업으로서 정당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신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 AI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중장기적 기반시설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병행되어야 AI 기술 주권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 ‘생활인구와 지역자원 연계’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반드시 필요”

전남도의의회는 최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전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도의회 의장인 김태균 민주당·광양3)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남의 상생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번이 전국 최초다. 조례안은 ▲전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상생관광 콘

텐츠 개발,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 사업과 지원 절차 ▲도민 제언제도를 통한 정책 질자 ▲상생 관광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안 마련 ▲상생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과 운영 등이 골자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군이 따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전남의 매력을 엮어내고, 지역을 잇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중요하다. 생활인구와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재판관회의 열고 현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현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현재법은 현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한다. 김 재판관은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현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무 총 리는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현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는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가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절차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 시외버스 적자... “운영 혁신 시급”

218개 노선 중 179개 82%가 적자...올해만 도비 160억 투입

전남 시외버스 노선 10개 중 8개가 적자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운영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민주당·무안)도 의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도비로만 160억 원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적자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운영 체계 전면적 혁신을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체 노선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증액돼 총 16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없이도 시외버스 이용객과 서비스질은 감소해 도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 노선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외버스 운영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도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국비를 확보 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초까지 추진될 버스 운영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의 광역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